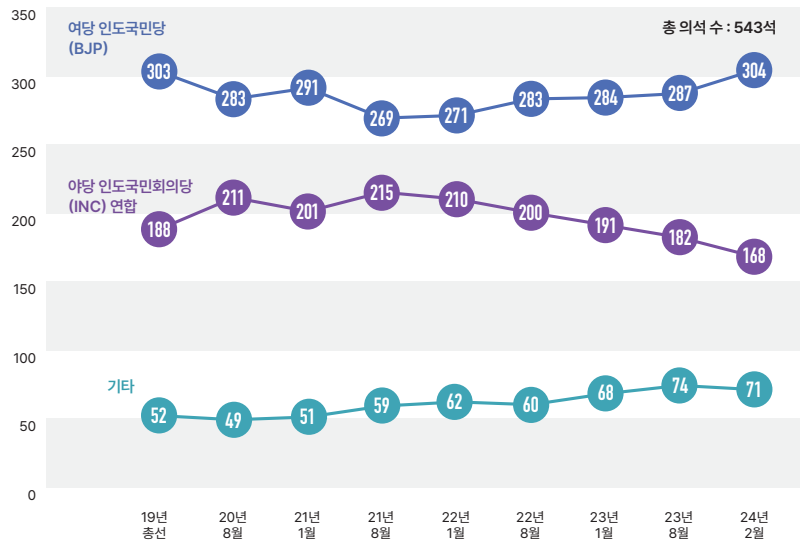


반도체 야심 모디 인도총리 3연임 유력, 기회와 위험요인 함께 살펴야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에서도 4월 19일부터 약 6주간 연방 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는 인도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는데, 상원의 경우 각 주의 정당세력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5년마다 치러지는 하원 총선은 직접선거를 통해 민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수장을 총리로 임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번 선거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을 중심으로 한 여당 연합이 이번 없이 승리를 거두며 모디 총리가 네루 초대 총리 이후 처음으로 세 번째 집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원 총선 이후 예상 의석 수 여론조사



자료 : India Today

모디 정권은 2014년 집권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주창하며 국내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보조금 제도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인허가 기간단축, 각종 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도 총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40%까지 끌어올렸으며, 아시아에 유입되는 총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22%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모디 정권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의 주요 목표이자 행정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마이크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모디 총리가 다시 연임하면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반도체 공급망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포스트 차이나'로 부각되는 인도는 대중국 리스크 완화와 생산기지 다각화 측면에서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의 합리적인 후보국이 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제공되는 파격적인 현금성 인센티브와 인도의 값싼 노동력은 대규모 초기자금이 수반되는 반도체·자동차 등의 제조업 투자에 있어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ICT 인력난 속에 인도는 매년 8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전세계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인력의 약 20%(약 12만 5천 명)를 고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위 25개의 모든 반도체 설계회사(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가 인도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서의 평균 노동비용 또한 멕시코와

베트남보다도 낮아 반도체처럼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또한 인도는 7,600억 루피(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Semicon India Programme'을 통해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70~75%(중앙 정부 50%, 주 정부 20~25%)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 투자 비용 27.5억 달러(한화 약 3조 7000억 원) 중 약 19억 달러(한화 약 2조 5천억 원)를 지원받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인도의 지방정부도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구자르트(Gujart)주는 2022년 반도체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계기로 마이크론의 ATP(조립·테스트·패키징) 공장 건설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카르나타카(Karnataka)주는 인도의 가장 큰 반도체 설계 허브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디샤(Odisha)주는 풍부한 광물과 천연자원 보유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타밀나두(Tamil Nadu)주는 핵심 제조업 허브라는 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인도의 지역별 반도체 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주	특징
구자르트(Gujart)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팹(fab)에 주력 -2022년 7월 'Gujarat Semiconductor Policy(2022-2027)' 정책 발표 -최초 200 에이커 토지 구입에 대한 75%의 보조금 지급 등 재정 혜택과 신속한 사업 승인 프로세스, 전력 및 수도의 용이한 이용 환경 등을 제공
카르나타카(Karnataka)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ESDM)와 반도체 설계에 주력 -'Special Incentives Scheme for the ESDM Sector 2020-2025' 정책 발표 -공장 및 기계 투자에 수반되는 자본 지출에 대한 20%의 보조금 지급, 최초 50 에이커 토지 구입에 대한 25% 보조금 지급 등 재정 혜택 제공 -50만명 이상의 풍부한 IT 인력 보유
오디샤(Odisha)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허브(technology hub)에 주력 -2023년 7월 'Semiconductor and Fabless policy' 정책 발표 -'Startup Odisha' 등 중소기업 창업 촉진 프로그램 지원 -철광석, 망간, 석탄 등 풍부한 광물 자원 보유
타밀나두(Tamil Nadu)	-인도의 주요 제조업 허브로 애플, 퀄컴, 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 유치 -'Flagship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지원 프로그램 발표 -최대 40%의 자본 보조금 지급, 5년 간 전기세 면제 등 재정 혜택 제공

자료 : 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가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인도보다는 미국과 국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인도 투자가 점차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숙될 가능성과 그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위험요인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보호주의가 가장 심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갑작스런 수입제한 조치, 자국 기업과의 거래 강요 등 인도는 자국 제조업 육성의 기치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비관세조치를 활용해왔다. 일례로 지난 해 8월에는 불시에 PC 및 노트북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삼성, 애플, 델 등의 주요 공급업체들을 당황케 했다.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면서도 보호주의적 조치가 빈번한 인도의 모순적 정책의 지향점은 결국 자국 산업 육성에 있다.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통해 외국 기업의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인도 기업과의 거래 의무 등 다양한 조건을 걸어 자국 산업 육성을 꾀해왔다. 한국 반도체 기업도 언제든 이 같은 보호주의 조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인도 내 반도체 생산이 확대되면 수입 대체가 가능한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사용할 인도의 인센티브도 커질 수 있다.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에 따르면 인도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80억 달러(약 36조 원)에서 2026년에는 약 640억 달러(약 83조 원)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 입장에서 적절한 리스크 대응과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KI**